

●일일스터디_표준안

박준원 / 경향신문 / 260609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장동혁 “일부 관내 사전투표소 ‘득표수 완전 일치’ 사례 발생” 부정선거 가능성 제기	정치	
2	이란·이스라엘, 휴전 후 첫 본토 공습	국제	

(1)기사/뉴스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인천광역시장 선거 송도 1동과 송도 2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유 후보와 박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이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전남 통합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위원회 일치라는 말만 할 뿐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확률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실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그래서 부정선거다’ 이견 아니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처음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밝힌 투표소는 서울지역 14곳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67곳으로 늘어나더니 전날에는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무려 140곳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결책으로 특검, 재선거, 그리고 사전투표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결국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과거 특검들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자신들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서는 안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게 맡겨야 국민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전국 재선거밖에 없다”며 “선관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번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한 후에 재선거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관위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 게시판에는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며 “여러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 투표에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많은 국민들도 사전 투표의 의구심을 품고 있다. 본 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 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요약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특검,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를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인천광역시장 선거에서 유정복 후보와 박찬대 후보의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득표수가 완전히 일치할 확률은 5억9000만분의 1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주, 전남 통합 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득표수가 똑같은 지역이 무려 10곳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장 대표의 주장에 부정선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기사/뉴스요약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휴전을 무색하게 해온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까지 이어졌다. 휴전 합의 이후 최악의 무력 충돌이다.

이스라엘군은 8일 엑스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서부와 중부의 이란 테러 정권 소속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 방송은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앞으로 며칠간 계속될 것에 대비하고 있으며, 전면 전쟁 재개 가능성도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이란도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부터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총 30발이며 대부분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스라엘 공군 기지에 보복 대응을 했다고 발표했다.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선박의 홍해 항해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를 겨냥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4월8일 미국과 이란의 협의로 휴전이 성사된 후 처음이다. 이날 공습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양측은 갈등의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리며 일촉즉발의 공방을 이어왔다.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양국 시민의 일상은 더 위태로워졌다. 이스라엘 전역에 사이렌이 울리며 시민들은 방공호로 대피했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예루살렘과 테헤란 상공에서는 폭발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은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올랐다. 직전까지도 협상 타결을 낙관하며 구체적 날짜까지 언급했지만, 충돌이 거세지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여러 차례 ‘중단’ 신호를 보냈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공습 연기’를 촉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말과 달리, 이란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휴전이 깨질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모두 즉각 휴전을 원한다. 어리석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국에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해당 글을 게시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직후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담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레바논 남부를 포함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될 경우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군의 작전 중지 발표 후 이스라엘도 공격을 중단했다. 채널12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요약 :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공방이 결국 이란과 이스라엘 본토 공격까지 이어졌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상대방 본토를 겨냥 공습을 벌인 것은 지난 4월8일 휴전이 성사된 후 처음이다. 협상 타결이 다시 불투명해지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 후, ‘어리석음이 방해하지 않는 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설스크랩 OR 클로징멘트

기사: 북핵 '인정', 북한을 동북아 파트너로 규정한 시진핑 / 국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7년 만에 국빈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북·중 정상 만남은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9개월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통적 우의 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이 방북에 앞서 북한 매체 기고를 통해 북한 핵을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을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한 것도 심상치 않다. 북·중관계 변화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시 주석은 이날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의 다극화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북·중관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상황에 긴밀히 협력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공동 행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아베 신조 총리 시기의 일본을 글로벌 안보 파트너로 격상시킨 것을 연상케 하는 전략적 변화다.

시 주석이 “쌍방은 국가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견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북한이 핵보유를 주권·안전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선언한 상황과 맞물려 중국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비핵화보다 안보 연대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 위치에 있던 중국이 입장을 바꾸게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다. 중국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초를 지지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는 현실과 이상 중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협상의 입구로 삼아 중장기적으로 축소,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에 열의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어지기만을 기다려선 안 된다. 시 주석 방북 이후 북·중관계 변화에 면밀히 대응하는 한편 미국·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